**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데이터 활용 계획서**

**2024712469 김민지**

1. 수집한 자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최근 5년간(2018~2022년) 상속세의 총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자진납부할 세액, 지역별 피상속인 수의 자료를 수집

1. 수집할 자료가 담긴 웹페이지 URL(국세통계포털)

(1) 공통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2) 국세통계조회 – 국세통계 – 2023년 – 6. 상속증여세 – 6-1-1. 상속세 신고 현황Ⅰ(납세지)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3&sttsMtaInfrId=20230103F01202328267>

1. 데이터 수집 결과

지난 5년간(2018-2022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총상속재산가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진납부할세액의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한 것에 비해 공제 및 감면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도에 감소하는 추세로 세수 확보가 줄어들었다. 피상속인수는 지역에 따라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1. 수집할 자료의 선정 이유 및 향후 활용 방안

현재 국내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OECD 평균 세율 2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높은 상속세율은 단기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고 국가의 세수 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2021년 기준 상속세가 전체 국세의 약 2.1%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며 조세 수입과 부의 재분배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상속세는 기업을 경영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조세에 해당하여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의 승계를 포기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로 인해 상속세 절감을 위해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 저하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경영 승계 이후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인해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다. 시기적으로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상속세가 과거 자산가에게만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된 보편적인 세금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을 앞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최근 5년간의 상속세 신고 현황 데이터를 통해 현행 세법에 따른 상속세 부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총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자진납부할세액의 증가 추이, 지역별 피상속인의 수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과세대상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지역별 피상속인 수와 분포 등을 통해 상속세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고 세부담 완화를 통한 국내 기업 경영의 원활한 승계 방안에 대해 활용하고자 한다.